



01 고등교육 정책 동향

- 대학 교육 특성화 사업 권역별 공청회 결과 02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 합의결과 안내 05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협력(교육부-대교협, 전문대교협 MOU) 09
- 전국 국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11
-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13
- 교육협력위원회, 공교육 활성화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15
- '대학재정과 고등교육 정책현안' 정책포럼 17

02 국회 소식

- 국회 교문위 주최 '대학 구조조정 정책 대토론회' 19
- [국회 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8582) 21

03 대교협 소식

- 2013년 제3차 대학윤리위원회 개최 22
- 2014학년도 정시모집 특별상담 실시(12월 17일~24일) 23
- 201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25
- 2013 대학정보공시 시범운영대학 하반기 워크숍 개최 26
- 공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양교육협력포럼 28

04 기타

- [대학특성화 심포지엄 개최] 대학특성화 방향과 추진전략 탐색 29

01 고등교육 정책 동향

대학 교육 특성화 사업 권역별 공청회 결과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3년 12월 3일(화) ~ 13일(금) [기간 중 5회]
- 장소 : 충청권 우송대, 동남권 부경대, 대경·강원권 경북대, 호남·제주권 전주대, 수도권 서울교대
- 목적 : 대학 교육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방향 설명 및 의견 수렴
- 주최 :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 참석대상 : 교육부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장, 권역별 소재 대학 관계자, 정책연구진

□ 발표 내용

○ 사업 기본방향

- 대학 특성화 :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야 경쟁력 심화 과정
- 국가 차원의 대학 특성화 육성 전략 속에서 대학 자율성 존중
-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체질개선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추진 유도
-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사업 개요

- 대학 교육 특성화 사업 : “(가칭) IK-33” (Innovation Korea-33)
- 사업단계(안) : 3단계 사업 구조 [19년(5년+7년+7년)]
- 14년 예산 : 2,569억원(수도권 특성화 사업 638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1,931억원)

-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고등교육법상 학교)
- 지원제외대상
 - 특별법에 의한 4개 과학기술원(대) 및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각종대학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참여 및 미인증 대학
 -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학사비리, 행정제재 등 사유가 중대 명백한 대학\

○ 세부 사업계획(안)

- 분야 구분 : 대학자율, 국가지원, 국가전략(지방만 해당) 분야로 구분
- 재원배분 : 대학 자율성 존중을 중심으로 학문간 균형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균형있는 재원 배분

구 분	대학 자율 분야	국가 지원 분야	국가 전략 분야	합 계
수도권	563억원(90%)	65억원(10%)	-	638억원
지 방	1,350억원(70%)	200억원(10%)	360억원(20%)	1,910억원

- 권역구분 : 광역경제권(5+2) 기준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 사업단 규모 구분 : 대(20억원 이상), 중(10~20억원), 소(10억원 미만) 규모 사업단으로 구분
- 사업단 구성 : 사업단은 전공·학과·부(간),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구성

○ 선정 평가

- 선정평가 지표(안) : 특성화 및 구조개혁 계획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지표로 구성(정성 60%)
 - ※ 기본역량 및 구조개혁 30% + 특성화 역량 70%
- 선정평가 절차(안) : 1단계 서면평가(2배수), 2단계 발표평가(1.5배수), 3단계 현장심사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2014년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후 참여 가능성

- 본 사업은 2+3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2년 후 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을 탈락시키고 신규 대학을 선정할 예정임. 1단계 사업을 5년으로 한 이유는 정권이 변경되더라도 한 해 더 지속해

가자는 취지임. 여러 곳에서 비판 받아온 사업의 단속성을 배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임.

○ 평가지표 중 취업률 평가 방안

- 취업률 강조에 따른 왜곡 현상이 있어 대학 전체의 취업률은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나, 특성화 사업단과 관련있는 취업률(질적 취업률)은 반영 예정임. 아울러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 연차 평가시 취업률은 당연히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정원감축 실적 반영 기간

- 기존 정원감축 실적을 몇년까지로 끊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며 논의 중임.
- 향후 감축 계획에 있어서도 2017년도 이후 조정보다는 선제적으로 2015~2016년에 감축하려는 계획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음

○ 대학의 우수한 특성화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과의 중복 지원 검토 요청

- 국회나 기획재정부에서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대학의 우수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교육비 환원을 등 일부 지표의 평가항목으로 반영 가능성

- 사업단별 교육비 환원율은 활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 지표로 활용할 항목을 제안해준다면 반영하겠음

□ 향후 일정(안)

-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 : 2014년 1월
- 사업 설명회 개최 : 2014년 1월
- 사업 신청 접수 기한 : 2014년 4월 중
- 선정 평가 및 사업단 최종 선정 : 2014년 5월 말
- 사업비 교부 등 사업 집행 : 2014년 6월 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 합의결과 안내

□ 추진 경과

○ 문화체육관광부,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11.4)

- 부당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징수기준과 불합리한 이용보상금 분배규정 및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미분배보상금 사용제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 개선 요청

- 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대교협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산정기준과 징수기관의 분배능력 및 미분배보상금 사용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 등('12.2.4)
-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장관 간담회('13.7.31, 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간담회('13.8.7), 교육문화수석 간담회('13.9.3) 등 회장단 활동 강화
-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추진사항 등에 대해 전체 대학에 안내함('13.11.20)

○ 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과 행정소송 제기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디지털대 및 명지전문대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산정한 2011년도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12.7.19)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수령단체 지정, 보상금 기준에 관한 고시, 보상금 산정방식 승인 통보 등이 무효임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12.12.)
- 행정소송 판결, 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대학에 대한 보상금 청구를 인정함('13.9.24)
 - *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서 항소함('13.10.4)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육부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함('13.11.19, 11.28)

○ 저작권법 개정 추진

- 새누리당 서상기의원 안(의안번호 2615호)과 민주당 유기홍의원 안(의안번호 5904호) 등 두 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 * 서상기의원(대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발의 일자 : 2013. 11. 16
 - 발의자 : 서상기의원 등 10인(정두언, 박인숙, 박성호, 홍지만, 김을동, 윤명희, 민병주, 박창식, 이에리사 의원)
 - 입법 내용 :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의안번호 2615호)

수업 목적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여 확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 제25조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 유기홍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13.7.8)_의안번호 5904

- 발의 일자 : 2013. 7. 8
- 발의자 : 유기홍의원 등 10인(도종환, 배기운, 이상민, 남인순, 정세균, 김운덕, 이용섭, 김상희, 박혜자 의원)
- 입법 내용 :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의안번호 5904호)

수업 목적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여 확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또한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도록 함(안 제25조제8항).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⑨·⑩ (현행과 같음)

- 출판협회 등의 반대활동에 따라 현재 개정안의 상정 및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

□ 관련부처 및 단체간의 협의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육부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함
 - 행정소송과 보상금청구소송 등에서 소송이 대학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에 저작권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음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함('13.11.28)
 - 2013년 보상금 적용 기준 : 일반대(1,300원), 전문대(1,200원), 원격대(1,100원)
 - 2011년과 2012년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는 면제함
 -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각기 취하함('13.12.4, 소송 취하됨)
 - 2014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의 범위내에서 인상률을 적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준을 고시함

□ 향후 추진 계획

- 회원대학에 비상대책위원회 및 관련 기관간 최종 합의결과를 안내하여 추인을 받음
 - 12월말까지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하여 '13년 보상금 징수를 '14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안내함
- 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개별대학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 체결 예정
 - 약정 체결과 관련한 약정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향후 대학에 안내할 예정임
- 저작권법 개정 추진
 - 현재 개정안의 상정 및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및 단체간의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개정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교육의 공익적 측면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전송하는 등의 경우에 보상금 지급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4항과 미분배 보상금을 징수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한 제8항은 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

교육부-대교협, 전문대교협 MOU체결 대학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협력

대학과 전문대학이 보유한 인프라를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에 적극 지원 약속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이하 전문대교협)는 12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서거석 대교협 회장,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이 참석하여 직접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등의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서 올해 2학기를 대상으로 42개 연구학교가 운영되었고, 내년에는 40개 중학교에서 1학기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14~'15년에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희망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과 전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캠퍼스 시설 등 물적 자원과, 교수, 학생 등 인적 자원이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에 활발히 지원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2개 연구학교 중 17개 중학교에서 38개 대학(대학 23교, 전문대 15교)과 연계하여 직업체험,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대학 시설 활용은 물론이고 교수 특강, 대학생 동아리 등의 인력 지원이 자유학기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기여하며, 공교육 활성화와 창의인재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지식정보화시대에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이를 진로지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직업교육의 중심인 전문대학이 적극 동참하여 그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총회



- 2013년 제5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석규, 목포대총장) 정기총회가 12월 12일(목) 오후 제주 그랜드호텔 회의실에서 열렸다. 고석규 회장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는 지방대학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2015년 실시예정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총장협의회는 이날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2013년 기준 55만9036명)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고 2025년 이후엔 입학정원의 30% 이상 미충원이 추산되는 등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대학 공동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육성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성장과 창조경제 구심체로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선 권역별 학령 인구 감소 추계와 지역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등록금 인상 현실화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국 25개 주요 국립대학의 등록금 평균보다 낮은 대학은 등록금의 단계적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립대학 시설비는 대학의 대응투자 없이 전액 정부재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학협력 진흥 10주년 정책포럼’ 개최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 농어업 및 사회적 기업까지 산학협력 대상 확대
- 글로벌 산학협력 정책교육 촉진 및 공학교육개선

□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이 주관하는 ‘산학협력 진흥 10주년 기념 정책포럼’이 12월 11일(수)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여 향후 산학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교육부 서남수 장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 한국 무역협회 한덕수 회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장 등 산·학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는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산학협력 성과와 문제점을 조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산업교육진흥법」(196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2003. 5)

○ 그간 정부의 산학협력 진흥 노력의 결과 전국대학(전문대학 포함) 중 77.3%(334개)가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채용조건형 계약학도가 확대*되고 기술이전 체결건수는 10배, 기술이전 수입료는 26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채용조건형 계약 학과/학생수 : 7개/457명('08년) → 41개/1,054명('12년)

** 기술이전 체결건수/수익 : 210건/19억('03년) → 2,029건/519억('12년)

□ 서남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창조경제의 원천이 되는 상상력과 창의성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인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패는 교육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계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는 10주년 기념행사와 정책포럼 등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기념행사(1부)에서는 산학협력 진흥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영상 상영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는 산학협력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여 교육부의 산학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10대 중점 추진과제에는 인문사회·예체능분야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대상을 농어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산학협력 정책교류 촉진 및 공학교육 개선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

1.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
2. 인문사회·예체능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3.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4. 산학협력 대상 확대
5. 인력교류 및 지식 공유 활성화 문화 조성
6. 글로벌 산학협력 정책교류 활성화
7.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8. 지역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9. 산학협력단 혁신역량 및 통합조정 기능 강화
10. 공학교육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 정책포럼(2부)에서는 ‘기업경영과 산학협력’(김지범 이지바이오 대표), ‘산학협력과 대학의 변화’(김우승 산학협력학회장), ‘개방형 지역기업 지원 네트워크 운영사례’(김승호 경북대 LINC 단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창조경제와 산학협력’을 주제로 이 건우 교수, 박양수 교수, 박상일 CEO, 강홍준 논설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교육협력위원회, 공교육 활성화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고교 문이과 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



□ 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12월 3일(화)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고등학교에서의 ‘문·이과 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교육 활성화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융합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오세정 원장(기초과학연구원)은 지식의 융합시대라는 최근의 트렌드를 융합의 다양한 유형 구분을 통해 설명하고, 21세기의 인재에게는 융합적 사고방식이 필수적이므로 통합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였으며, 다만, 현실적 고려에서 점진적인 추진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문·이과 교차 지원 확대, 복수연합전공 제도 활성화, 융합전공의 확대, 기초 교양교육 강화 등의 대학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 토론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다양한 교과를 접하고 융합의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학교수업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사교육이 조장되거나 대학입학 혹은 취업후 전공심화 부분에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 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문이과 통합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날 토론회에서의 의견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대학재정과 고등교육 정책현안’ 정책포럼

대학재정과 대학구조개혁 정책, 지역대학 육성정책, 등록금 정책 등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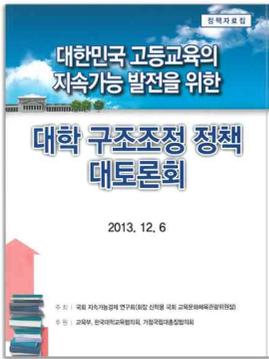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가 12월 13일(금)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정책 현안>을 주제로 제44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대학 및 학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하여 대학재정과 대학구조개혁 정책, 지역대학 육성정책, 등록금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기획처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200여 대학 중, 응답자 58명)가 발표되었는데, 전국 4년제 대학의 기획처장들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중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대학 자구노력 요건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구조조정 방식의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제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교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확보율에 비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가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기획처장들이 가장 찬성하는 정책은 국가장학금 규모 확대,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대학 평가 방식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지지하는 지역간 편차도 드러났다.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는 비수도권은 적극 찬성인데 반해 수도권은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정원의 학생을 정원내로 포함하는 것과 구조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입장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 이 교수는 “최근 대학가의 역차별 논란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대학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강화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서는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제2발제자로 나선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지역대학과 수도권대학, 국립대와 사립대가 고등교육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지원액이 적기 때문”이라며 “고등교육재정지원을 공약대로 OECD 평균인 1.1%로 확대하면 대학간 갈등요소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 반 교수는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은 8조4555억원 수준이다. 이중 국가장학금 지원 3조7195억, 국립대학 운영 지원 2조3429억을 제외하면 실제로 대학에 지원되는 것은 2조3931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1.1% 수준으로 확대하면 한해 14조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반 교수의 주장이다. 반 교수는 “지역대학 육성과 반값등록금, 대학구조개혁 등을 지원할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02 국회 소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주최 대학 구조조정 정책 대토론회 개최

“구조조정 일관성 담보,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 "일관성을 지닌 구조조정 계획이 필요하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조조정 학생 비율부터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비율까지 여야가 합의해 비율을 먼저 정해야 한다." 12월 6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구조조정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잦대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 국회 지속 가능경제 연구회(회장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 발제 발표에 나선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77%라는 비상식적인 사립대 비중이 결국 OECD 최고수준의 고등교육 민간 부담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존의 대학 통합 정책은 국립대에 집중되어 있고 입학정원 감소 역시 국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국립대 위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어 부교육 영산대 총장은 "대학 구조개혁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평가에서는 하위라고 해도 그 분야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토론자들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실상 지방·국립대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 교육부 구조개혁 연구팀장을 맡은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와 대학의 이익에서 독립된 대학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 독립된 전문집단이 객관적·전문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작고 알찬 대학이 구조조정에서 덜 손해 보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안규운 전남대 기획처장은 "대학 구조조정은 무차별적인 상대평가가 아니라 국·공립대학별로 유기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사립대학과 같은 구조조정은 결국 지방대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회장은 "대학의 양극화, 서열화 문제는 교육부가 평가기준을 정하고 집행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의 불균형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산업이 지방에 적절히 분산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 학령인구에 대한 통계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보건 인천대 겸임 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맞지만 우리나라 통계 자료는 부실하거나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았다"며 "학령인구를 28만 명 감소해야 한다고 확정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타당한지 통계 수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국장은 정부 구조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견임을 전

제한 뒤 "과거 10년보다 더 많이 양적 감축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 정원을 줄이더라도 개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8582)

○ 발의자 및 발의일자
정부 (2013.12.17.)

○ 입법내용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는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폐쇄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03 대교협 소식

2013년 제3차 대학윤리위원회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월 17일(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3년 제3차 대학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감사(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에서 대학이 성적증명서를 원 성적과 다르게 이중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을 성적 부풀리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몇몇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기사화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학의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는 졸업 사정시 F학점이 무단 삭제되는 등 원 성적과 다르게 성적증명서를 이중 발급하는 관행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으며, 윤리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12월 20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12월 중 개선 권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정시모집 특별상담 실시

12월 17일(화)부터 정시모집 특별상담주간 설정,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무료 전화상담 실시
대교협 온라인 상담실 병행운영, 24시간 무료상담 실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입학정보·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입상담센터 정시모집 특별상담

특별상담기간	2013년 12월 17일(화)~12월 24일(화)
상담시간	• 전화상담 : 9시~24시 • 온라인상담 : 연중 24시간
상담방법	• 전화상담 : 1600-1615 • 온라인상담 : 일반전화 이용방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http://univ.kcue.or.kr)의 배너 클릭

상담전화 1600-161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사교육비 경감, 정확한 대학입학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입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지원을 앞두고 “특별상담주간”을 설정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상담시간을 더욱 늘려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 대교협 대입상담센터(☎1600-1615, 홈페이지: univ.kcue.or.kr)는 12월 17일(화)부터 24일(화)까지 “특별상담주간”으로 설정하여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무료 전화상담을 실시, 온라인 상담은 연중 24시간 진행한다. 학생들이 방과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 대입상담센터는 210명의 대입상담교사단과 상담전문위원이 변화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결과에 따른 정시모집 / 대학별고사 / 대학입학전형 / 대학입학 고민상담 등 대입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 210명의 대입상담교사단은 10년 이상의 진학지도 경력이 있는 현직 진로진학상담교사, 진학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대학입학 관련 실질적인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2012년 3만5천여건 상담)
- 전화상담은 전국 공통 1600-1615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집중기인 8월부터 12월까지의 09:00~22:00, 평시인 1월부터 7월까지의 09:00~18:00 이용이 가능하다.
- 특히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 개발한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은 전국 1,040개 협력 고교로부터 수합된 10만건의 실제 합격·불합격 사례(전년도 정시모집 기준)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입상담교사단 및 전국 2,000여개 고등학교에 배포되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대학입학 상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변화된 2014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에게 대학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담 방법

- 전화상담 : ☎1600-1615

12월 17일(화)~24일(화) - 09:00~24:00

※ 특별상담주간 중 24:00까지 운영

- 온라인상담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http://univ.kcue.or.kr>) 접속 → 진로진학정보 → 온라인상담 클릭(팝업창 안내)

※ 회원가입 후 이용, 연중 24시간 운영

- 대교협은 또한 전국 지역 교육청과 함께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와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정보는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의 ‘진로진학정보’에서 ‘설명회 일정표’를 통해 제공한다.

대교협 201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준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2013. 12. 5 (목)~12. 8(일) 4일간 “201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코엑스 1층 A홀에서 EBS 교육방송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 등 역대 가장 많은 전국 116개 대학이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을 위한 1:1 맞춤형 개별 상담이 진행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110,126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 또한 이번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는 “상담을 위한 박람회를 만들자”라는 컨셉 아래 각 개별 대학부스에서 차분한 분위기의 상담이 이루어져 관람객으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 201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2014년 7월중 코엑스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더욱 더 많은 대학의 참여와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도 대학정보공시 시범운영대학 하반기 워크숍 개최

대학과 소통하는 워크숍으로 자리매김
대학정보공시 정정 최소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강화



- 2013년 대학정보공시 시범운영대학 하반기 워크숍이 12월 12일(목) ~ 13일(금)까지 1박 2일간 부산 씨클라우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는 공시대상 고등교육기관 중 45개 대학을 시범운영대학으로 선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대학과 정보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대학알리미와 입력시스템에 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여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정보공시의 오류 및 정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대학정보공시센터 이재혁 센터장은 연간 운영실적과 201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하여 대학현장에서 내년도 대학정보공시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학정보공시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여 대학의 자체적인 대학정보공시 자료검증 방법을 설명하였다. 전국 대학평가협의회 회장인 신재영 팀장(중앙대)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한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정보공시 자료의 중요성과 다양한 평가방법을 안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용법을 설명하였다.

- 대교협 정보화표준팀 손중호 팀장은 대학정보공시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내부 구성 설명을 통해 현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원리 이해를 돕고, 대학정보공시 전반에 대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대학정보공시센터는 앞으로도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대학정보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시범운영대학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대학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과 대학의 일반항목 담당자들이 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서 개정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제3회 교양교육협력포럼 공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양교육



-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12월 11일(수) 더케이서울호텔 대금홀에서 '공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양교육'이라는 주제로 제3회 교양교육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 1부 순서에는 손동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지인 교수(한국공학교육인증원 사무처장, 건국대학교)가 “공학 교육 인증의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보경 교수(연세대학교 학부대학)는 “공학인을 위한 교양교육: 공학교육인증, 형식을 넘어 내용을 돌아볼 때이다”라는 주제로 공학교육 인증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 2부 패널 토론에서는 김유신 교수(부산대학교), 송동주 교수(한국공학교육인증원 부원장, 영남대학교), 이의수 교수(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동국대학교)가 공학교육인증에서 정한 12가지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 교양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학특성화 심포지엄 '대학특성화 방향과 추진전략 탐색'

- 행사명: 대학특성화 심포지엄
- 주제: 대학특성화 방향과 추진전략 탐색
- 일시: 2013년 12월 18일 13시30분~17시
- 장소: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 주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시 간	진 행 내 용	휴 식
13:30 ~ 14:00	등록	15:30 ~ 17:00
14:00 ~ 14:15	개회식 (사회: 주희정 특성화지원센터 부연구위원)	
14:00 ~ 14:05	인사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14:05 ~ 14:15	특성화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황규희 대학특성화지원센터 소장)	
14:15 ~ 15:15	주제발표	
14:15 ~ 14:35	• 대학교 대학특성화와 지역대학육성방안 (구연희 교육부지정대학육성과 과장)	
14:35 ~ 14:55	• 산업계 대학특성화와 산학협력 (박동 대학특성화지원센터 연구위원)	17:00
14:55 ~ 15:15	• 고교 대학특성화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방안 (주인중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개발·운영지원센터 선임연구위원)	

✉ '주간대학교육' 구독신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주간대학교육' 발간하여 매월링 서비스를 통해 한 주간의 대교협 동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소식, 국회 입법 동향, 고등교육 정책 토론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대학교육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교협 대외협력홍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919-3825)
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